

이번 국가직 9급 시험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직 시험 난이도가 상향조정되면서 2016년 시험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소한 주제와 질문 방식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9급 문제를 보면 7급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으나 2번(국세징수실적), 6번(조직시민행동) 문제처럼 생소한 주제들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번과 같은 문제는 해마다 비중이 달라지는 데(30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만이 걷히는 해가 더 많았습니다만, 2013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고, 2015년에는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징수실적이 아닌 2014년 징수실적을 출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라 보여 집니다.

하지만 기본 내용이 잡혀 있고,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아는 내용에서 정답을 찾았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야겠지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진행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1) 기본 내용에서 실수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남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된다), (2) 불필요하게 파고들어 가지 말 것(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세요), (3) 오답을 유도하는 지문이나 모르는 지문에 손이 안가도록 하는 것, (4) 출제자는 단무지라는 것(출제의도 그런 것은 없다. 내가 아닌 테서 정답이 나온다), (5) 낯선 내용이 나왔을 때 해당 문제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배웠던 이론과 개념의 흐름 속에서 판단할 것, (6) 자신이 실수하는 패턴을 빨리 인지하고 이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져야겠지요?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YOU HAVE DONE!

- 강제명(공무원단기학교 행정학 전임)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 | |
|-------------------|-----------------------|
| ① 가외성(redundancy) | ② 합리성(rationality) |
| ③ 효율성(efficiency) | ④ 책무성(accountability) |

[정답] ①

[해설] 설명은 가외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외(加外)성이란 문자 그대로 필요한 것 외로 추가로 기능이나 기관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능률성을 저하시키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체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에 가외설계가 요구된다. 다음 내용 정도는 확인해 두기 바란다.

- 개념 요소 : 중복, 중첩, 동등잠재력(등전위현상)
- 장점 : 안전성, 신뢰성, 창의성, 적응성, 정보의 정확성
- 단점 : 감축관리에 반하며 능률성 저하(비용 유발), 갈등

0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정답] ④

[해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국세 징수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많았다(참고로, 2015년에는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이 걷혔고,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순이었다).

연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2014	57조원	54조원	42조원
2015	54.1조원	60.7조원	45조원

0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정답] ③

[해설] ②③④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 하며, 직렬의 군을 직군이 라 하고,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위를 직류라 한다. ②와 ④가 뒤바뀌었다.

①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난이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지문은 직급에 대한 설명이다.

0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 |
|----------|-----------|
| ㉠ | ㉡ |
| ① 수입대체경비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② 전대차관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③ 전대차관 | 예산 공개의 원칙 |
| ④ 수입대체경비 | 예산 공개의 원칙 |

[정답] ①

[해설] 설문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데, 국가재정법은 통일성 원칙과 완전성(총계주의) 원칙을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조항에 묶어서 적고 있다.

0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정답] ③

[해설] 고위공무원단은 (1) 개념적으로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기관 간 전용될 수 있는 공공관리라는 지식과 전문가가 있으며, 공익에 관한 총체적 관점을 갖기 위해 최고관리자가 부처 간에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행부는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배치하고 지시하는 데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3) 국정운영 통합성과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제도로, 한국은 기존의 신분위주의 인력관리체제를 능력위주의 인력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대상 : 실국장급으로 보하는 일반직, 별정직, 개별법령이 정하는 특정직
- 임용직위 : 개방형(20%), 공모직위(30%), 자율운영직위(50%)
- 인력관리 : 부처 자율성 강화(장관책임 강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역량평가, 적격심사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 중 일반직은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고위공무원의 전보 등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를 제외한 임용권은 장관이 행사한다. 별정직의 경우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제외한 임용권은 장관이 행사한다.

①② 부처, 직렬·직군 및 계급 구분 없이 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0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정답] ②

[해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은 공식적인 담당 업무도 아니고 적절한 보상도 없지만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 혹은 자발적인 행동(A discretionary behavior)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직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직무 외 행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직무기술서 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시민의식의 자발적 발현을 통해 협력적인 분위기를 고취하는 행동을 말한다(공식적인 직무요건 < 자발적인 행동). ②③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를 활성화 시키려면 직무만족, 조직공정성(절차적 공정성 및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비공식적인 보상, 직속 상사의 관심과 인정이 중요하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은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 역할 모호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요소로 다음이 제시되고 있다.



이타성 (altruism)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구성원들을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말한다.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동료의 일을 함께 처리해 준다든지 새로 입사한 사원이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심성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명시적, 암묵적 규칙을 충실히 준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필요 이상의 휴식 시간을 취하지 않는 것, 회사의 비품을 개인 소유처럼 아껴 쓰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직무상 책임 이상의 봉사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신사적 행동 (sportsmanship)	정정당당히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불만이나 불평이 생겼을 경우 이를 뒤에서 험담하고 소문내며 이야기하고 다니기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의성 (courtesy)	자신의 업무나 개인적 사정과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적 행동을 말한다.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사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필요한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행동도 이에 속한다.
시민정신 (civic virtue)	조직 내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행동이다(책임과 솔선수범). 동아리 및 친목회 참여 등 다른 구성원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맺는 사회적 활동,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변화주도적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개념이 정의된 지문(보통 지문 ①에서 제시된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또한, citizenship behavior를 통해 시민성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② 역할모호성은 어느 경우에도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0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정답] ③

[해설] 설문은 정책 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형으로는,

정책지지 연합모형	공사조직을 망라한 행위자(이들은 공유된 신념을 보유)로 구성된 정책지지연합이 존재하며, 이들의 주장이 정치인·관료·시민단체 등 중개인을 매개로 입법화되고 집행되며, 학습을 통해 다시 정책과정에 환류됨. (i) 정책변화는 10~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 과정이며, (ii)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며, (iii) 정책학습을 통해 정책이 변동된다고 주장.
패러다임 변동모형	정책을 지배하는 기존 패러다임(케인즈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등장하면 기존 정책 내용이 수정되지만 이러한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존 정책의 대폭적 변동을 초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정책형성은 특정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간의 선택의 문제로, 정책이슈나 상황, 그리고 제도맥락이 정책관련 이익집단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짐
흐름 모형	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통합한 모형(Kingdon의 정책의 창)

①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경로의존성이나 잠금효과(lock-in, 제도의 협착)가 기존 제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경제적 위기나 외적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중요한 분기점) 제도나 정책의 급격한 변화(단절적 균형)가 발생한다고 본다.

④ 제도의 협착(lock-in, 잠금효과)이란 제도적 정체상태를 말하는데, 거래비용이나 생태요인, 경로의존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생태론은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생태 진화과정을 통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단절적 균형 등을 통해, 거래비용이론은 잠금효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날

때, 복잡계 패러다임(혼돈이론)은 창발성·나비효과·상호학습·공진화 등으로 인해 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지문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전제로 한 설명으로 보인다.

0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정답] ③

[해설] ③ 빅데이터는 최근 SNS와 함께 데이터 빅뱅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적인 데이터와 관련된다. 빅데이터란 사진·비디오·텍스트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 정보(information)로 인식 되는 데이터가 아닌, 클릭·검색기록·로그·시그널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Velocity), 다양한 종류(Variety)가 생산되는, 대용량(Volume)의, 복잡성(Complexity)이 높은 데이터(3V,C)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에는 데이터 배기가스(data exhaust) 혹은 데이터 쓰레기로 보았으나, 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정책 및 상업적 정보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0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문 ②는 2008년 군무원 시험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그 심사기간을 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예결특위 위원장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정답] ④

[해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는 (1) 비공식적이고 분권화된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며, 행위자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2) 대립에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3) 행위자들의 관계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일 수도 있고, (4) 개방적 혹은 폐쇄적인 여러 형태의 정책네트워크가 공존한다.

하위정부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망
영역별로 형성된 네트워크 폐쇄적인 사적이익정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폐쇄망 (폐쇄성 · 안정성 · 지속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방적 · 유동적인 망
조용한 협상	정책대안 창출 · 평가	특정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모색
이익집단 + 관료 + 의회 위원회	하위정부 + 전문가 혹은 관료집단 + 전문가	NGO 등의 참여

④ 정책공동체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공유되고 교환되는 장으로 권력과 자원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공유된 가치관이 있어 갈등보다 협력관계를 보인다.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권력과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갈등이 나타난다.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정답] ①

[해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를 임시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예산·잠정예산·준예산 제도가 있다. 한국은 준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사무배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집단사고는 집단 내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판단능력의 저하현상을 말한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내려는 유무형의 압력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다수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서 나타난다.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과신,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환상에서 비롯되며, 때로는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델파이, 브레인 스토밍, 변증법적 토론, 명목집단 기법 등이 있다. 크게 본다면, (1) 집단역량에 대한 과대평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통해서 해소를 도모하고, (2) 폐쇄적 아집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나 반대의견을 표출시키는 변증법적 토론을 끌어내고, (3) 획일성의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3의 의견이 표출되도록 자유로운 의사를 장려해야 한다.

④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이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지만(정부 개입 방식으로 보통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규제 등이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④ 정부실패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들, 민주화와 시민의 권익증진 및 시장 실패에 대한 인식확산이라는 사회·정치적 요인, 정보비대칭성(산출물 정의 및 측정 곤란, 생산기술 불확실성 등), X비효율성과 관료제적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정답] ③

[해설] 설문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역사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① 상실요인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탈퇴)하는 경우, ② 회귀요인은 실험집단을 구성할 때 극단적인 값을 선택하는 경우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④ 검사요인은 여러 번 테스트하거나 실험전 측정이 실험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역사요소	• 우연한 사건. 실험과 무관한 사건으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숙요인	• 구성원들이 정책효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상실요인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탈퇴)하는 경우
회귀요인	• 실험직전의 1회 테스트로 집단을 구성할 때, 특별히 좋거나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극단적인 값)을 구성하는 경우 실험이 진행되면서 원래 위치로 회귀
오염효과	• 실험집단에 적용되어야 할 처치가 비교집단에 누출(누출효과) • 실험집단의 행동을 비교집단의 피실험자가 모방(모방효과)
기 타	• 선정요인, 측정도구변화, 선발-성숙의 상호작용, 처치-상실의 상호작용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행동강령은 1990년대 윤리정부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0년대 OECD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이 공직윤리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나오고, 공직자 부패 등으로 신뢰적자 문제가 대두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자 그 대안으로 (단순한 반부패전략을 넘어) 윤리관리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윤리정부 개념을 제시하였고, 행동강령의 제정을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넓게 보면 윤리강령(공무원 선서, 공무원 윤리헌장과 같은 윤리지침), 행동강령(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 실천강령(개별 부처가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실천지침)을 포함한다. 한국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금품·선물·향응 수수 금지·제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의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①

[해설] ① 민츠버그는 조직의 주요 구성부분에 따라 다섯가지 조직형태를 나누고 조정기제를 상호조절, 직접 감독, 작업과정의 표준, 산출물 표준, 기술의 표준으로 제시했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Daft가 제시한 수평적 조정방식 중에서 직접 접촉 방식에 속한다.

수직연결	조직 내 상하 간의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계층제(Hierarchical referral), 규칙과 계획, 수직정보시스템, 계층직위의 추가 등의 방법이 있다.
수평연결	조직 내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서 간의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 직접 접촉(연락 역할 담당자), 임시 작업단(TF), 사업관리자(Project manger), 사업팀(Project team) 등의 방법이 있다.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A. 서열법(job ranking) | B. 분류법(classification) |
| C. 점수법(point method) |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 | | | | |
|---|---|---|---|---|
| | A | B | C | D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ㄹ | ㄴ |
| ③ | ㄷ | ㄴ | ㄱ | ㄹ |
| ④ | ㄷ | ㄱ | ㄹ | ㄴ |

[정답] ④

[해설] 직무평가에서 계량적 방법으로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비계량적 방법으로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다. 서열법은 그 직위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중요도 등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며, 점수법은 각 직무를 등급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점수법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계량화가 곤란한 공직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가 (예컨대, 점수 대신 상중하로 분류하는) 분류법이다. 또한,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을 발전시킨 제도로 기준이 되는 직무를 중심으로 요소들을 비교하여 계량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즉, 핵심직무가 되는 대표직무(key job)를 선정하고, 대표직무와 평가대상 직위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적 평가방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구 분	직무와 등급기준표의 비교	직무와 직무의 비교
계량적 방법	점 수 법	요소비교법
비계량적 방법	분 류 법	서 열 법



[직무평가 방법]

- 서열법은 직무평가 중 가장 간단하고 일찍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분류 담당자들이 각 직위가 지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평가하고 직위 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객관성이 낮다.
- 점수법은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요소의 비중을 고려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등급기준표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모두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이 복잡하고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평가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을 미리 작성한 등급기준표를 사용한다. 등급기준표를 사용하지만, 대상 직무를 구체적 요소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서열법과 같다. 간단하고 직무 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직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대상직위나 직무가 복잡하고 평가대상직위가 많은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 요소비교법은 점수법의 단점인 평가요소 비중 결정과 단계구분에서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점수법처럼 공통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한 후 분류대상직위를 비교평가하게 된다. 대표직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수액과 동시에 등급이 결정되지만 대표직위의 평가가 잘못된 경우 전체적인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며 서열 결정에서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① \neg
② \neg, \perp
③ \perp, \sqsubset
④ \neg, \perp, \sqsubset

[정답] ②

[해설] ㄱ. 이익집단론은 국가를 중립자로 가정하면서 정책은 갈등·경쟁하는 집단 간의 타협·조정 결과로 본다. 권력분립, 중보회원론, 잠재적 이익집단 등을 통해 설명한다. 맞는 지문이다.

나. 신다윈주의론은 다윈주의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 국가가 중립자가 아님을 인정한 이론이다. 기업집단은 특권적 지위(자본의 구조적 힘)와 이데올로기적 방어수단에 의해 그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며, 정부는 기업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다. 맞는 지문이다.

㉔. 하위정부론은 (신다원주의의 하나로) 정책영역별로 형성되는 이익집단·관료·상임위원회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정당은 하위정부의 참여자가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정답] ②

[해설] 티부 가설은 지방자치는 민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표출되고, 생산자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재가 자치단체에 의해 공급된다면 경쟁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 지점이 티부가설의 출발점이다.

즉, ① 무수히 많은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④ 각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공공재 수준과 소비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조세) 수준이 정확히 알려져 있어야 한다.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각 지역사회는 경쟁력을 위한 생산요소(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merit)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소비자인 주민이 자신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식당이 마음에 안들면 다음번엔 그 식당에 안가듯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voice보다는 exit라는 수단을 통해 선호를 표출한다). ② 이를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없어야 하고 이동에 거래비용이 없어야 한다.